

##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재검토 필요

대한민국 국방부 김승택 준장

지난 3월 26일 밤, 서해상 NLL부근에서 연안 경비 및 초계작전을 수행 중이던 한국의 해군함정 천안함이 침몰했다. 함체는 두동강이 났고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정부는 즉각 침몰한 선체를 인양하여 침몰원인을 조사하였다.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천안함은 내부폭발이 아닌 외부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하였으며, 수거된 증거물을 정밀 조사한 결과 북한군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한국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행위는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지적하며 확고한 대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동맹국이다. 한미동맹의 기본임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60여년 동안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적대세력을 물리 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치적 의지의 과시를 통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적대세력의 도발을 억제해왔다.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지난 60여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음으로서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건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한계와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은 북한의 전면전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천안함 사건과 같은 제한된 국지도발에는 규모의 공격에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군사적 공격행위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현재의 확장억제 정책은 이번 사건과 같이 규모와 범위가 작고 단시간에 종결되는 일회성의 도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은 현행 확장억제 정책의 한계를 간과하였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사실 천안함 사건 이전에도 서해상 NLL부근에서는 남북한 해군간 수차례의 교전행위가 있었으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발동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이제 그동안 “전가의 보도” 처럼 인식되어온 확장억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천발의 핵무기가 알 카에다를 막는데에는 무용지물이듯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국지도발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고려해 볼 때 전면전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반면, 금번 천안함 사건과 같은 국지도발의 가능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위협이 변화하면 대응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을 막을수 있는 새로운 확장억제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은 북한의 도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군사적 수단은 물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망라하여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북한의 지도층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구체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대응방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기본임무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새로운 확장억제 정책의 마련은 한미동맹의 존재가치와도 직결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는 한미동맹을 환영하고 지지해 줄 한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번 천안함 사건의 사후처리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시험의 과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